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 의 자 : 박정현 · 민병덕 · 박해철
전현희 · 김주영 · 전용기
김성희 · 이강일 · 박홍배
최혁진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9조까지”를 “제5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복종의 의무)”를 “(명령 준수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①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2. 「정치자금법」 제10조에 따른 후원금 기부
3.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입당

제58조를 삭제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 중 “제42조·제43조 또는 제58조”를 “제42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u>제59조까지</u> ,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 <u>제56조까지</u>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u>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 ----- ----- <u>아니한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u>복종의 의무</u>)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제49조(<u>명령 준수의 의무</u>) ----- -----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

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 -----

----수 있으며,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삭 제>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
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

제57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①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2. 「정치자금법」 제10조에 따른 후원금 기부

3. 「정당법」 제23조에 따른 입당

<삭 제>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83조(벌칙) 제42조·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삭 제>

제83조(벌칙) 제42조 또는 제43조

<p>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 -----.</p>
--	-----------------------------------